

종합

패권주의 버리고 협력하는 지구촌 열었다

■ 오바마 노벨 평화상 수상 이유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유엔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 분쟁을 가능한 대화와 타협으로 풀려는 것으로 압축된다. 중동문제나 북핵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패권주의를 버리고 대화와 협상으로 국제 갈등을 조정하는 평화적인 외교노선은 결국 오바마를 올해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게 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대화를 중시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9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발표하면서 "오바마만큼 전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국민에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 인물도 크히 드물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다자 외교와 핵 군축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오바마가 대통령으로서 국제 정치에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유엔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다자 외교가 중심 위치를 되찾도록 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가장 힘겨운 국제분쟁에서도 대화와 협상이 (분쟁해결)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다"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오바마의) 비전은 군축과 무기통제협상에 큰 자극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의 외교가 세계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세계인 다수가 공유하는 가치와 입장을 기반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한다는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했지만, 올해 상을 받기에는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마감시한인 지난 2월 1일을 앞두고 불과 2주도 채 안 되는 기간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올해 노벨평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뉴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는 네타야후(왼쪽) 이스라엘 수상과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다.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는 중동평화회담 재개와 군축 등 외교 성과에 힘입어 취임 1년도 안 돼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연합뉴스

화상 후보 명단에는 사상 최고로 많은 205명이 올라와 그 어느 때보다 수상자를 예측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노벨위원회는 예상을 깨고 오바마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해, 세계 평화에 대한 그의 노력에 지지를 보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란 핵 사태 등으로 고전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정책은 물론 의료 개혁 등 당면한 국내 현안 해결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보고 있다.

CNN인터넷 뉴스는 "조지 미첼 중동 특사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이 중동평화, 북핵문제 등을 위해 중동과 유럽, 러시아를 순방 중에 있다"며 "(오바마)의 수상 소식이 외교 현안을 푸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은 1906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과 1919년 우드로 윌슨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2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으며 앨 고어 전 부통령은 2007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시설

퇴려 서민 희망 꺾는 '희망근로사업'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 중인 희망근로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서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한다. 희망근로사업이 5개월째 접어들면서 다수의 공무원 가족이나 수억원의 재산을 비록한 무자격자가 참여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전국에서 7만명 이상의 서민들이 대기자로 이름을 올리고 목을 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희망근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심스럽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참여 기준인 최저생계비 120%(4인 가구 기준 159만6천원)를 초과한 참여자 비율이 31%나 됐다. 또한 전체 참여자 7천249명의 2.4%인 170명은 1억3천500만원의 재산 기준을 초과했다. 이 가운데 13명은 3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남

역시 최저생계비 120% 이상을 벗어난 사람이 36%, 재산기준을 넘는 참여자는 262명에 달했다.

서울과 경기 2곳에서는 490여명의 공무원 가족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에서도 이런 황당한 일이 없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국고와 지방비 2조원 이상 투입된 희망근로사업이 무자격자나 공무원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 빈곤층을 돕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돼야 할 소중한 협세가 엉뚱한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희망근로의 실상을 낱낱이 규명해 무자격자에게 지급된 돈은 전액 회수하고 관련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희망근로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고, 소중한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군복무 가산점제' 공론화 과정 거처야

10년 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던 '군복무 가산점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병무청이 병역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군 가산점제도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가산점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여성계 반대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병역 비리가 근절되기는커녕 수법이 교묘해지는 것은 물론 계층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면서 병역의무 이수자를 대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은 나름 타당성이 있다. 대한민국 20대 초반 남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군대 문제다. 인생 황금기에 상당 기간 학업을 중단하고 시험 응시 기회도 제한받는 군 복무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 역시 만만치 않다. 여성계는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가혹이나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군 가산점제가 양성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법제처도 위헌판결된 입법에 관한 재입법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고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론수렴과 토론 과정을 거쳐 어떠한 형태로든 매듭 지을 필요가 있다. 명분만 앞세워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 목소리를 최대한 수용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여성계 역시 상대방 주장을 무시하지 말고 귀를 열

어놓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준금리 2.0% ... 8개월째 동결

韓銀 "당분간 금융완화 기조 유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9일 당분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정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금융완화 기조는 당분간 유지하면서 4분기 이후의 완만한 경제성장, 선진국경제, 원자재시장 등을 평가하면서 경기가 꾸준히 좋아지고 금융시장이 안정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목분야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둔

화되는 움직임이 있으며 주택대출 증가속도도 떨어졌다"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지, 잠깐 쉬고 그런 (불안) 심리가 되살아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가격이 안정된다면 통화당국은 상당히 짐을 더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내리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2%는 금융완화 정도가 강한 수준이며 금리인상이 그렇게 먼 훗날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바로 다음 달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고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오전 정상회담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북핵 그랜드바겐' 협력 합의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9일 청와대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이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 일괄타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랜드 바겐은 이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북핵 해법으로, 6자회담에서 북핵 프로그램을 사실상 폐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안전을 보장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일괄타결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일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 두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방안에 공감하고 일괄타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키

로 했다"며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문제에 대해 깊이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토야마 총리는 "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랜드 바겐, 일괄타결 방안이 아주 정확하고 올바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지의사를 밝힌 뒤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일괄적, 포괄적으로 문제를 파악해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한 경제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장성군 '대통령상'

'2009 도시대상' 평가

순천시 국토부장관상

장성군과 순천시는 9일 '2009 도시대상' 평가에서 각각 대통령상과 국토해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관, 국토해양부 주최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활력도시, 문화도시, 환경도시, 녹색교통도시, 안전·건강도시, 교육·과학도시 등 6개 분야 나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진행됐다. /최원일기자 cki@

전남도교육위 의장 한이춘씨

전남도교육위원회 제13대 의장에 한이춘(61) 위원이 당선됐다.

9일 전남도교육위원 8명 중 6명이 출석한 가운데 치러진 선거에서 한 위원은 5명의 지지(기권 1명)를 얻었다. 서건용 전 의장과 조춘기 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 위원은 지난달 30일 의장 불신임 파동으로 사퇴한 서건용 의장 후임으로 내년 8월 말까지 의장직을 맡게 된다. 한 의장은 순천 출신으로 3대 교육위원을 지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5공 때나 하던 수법인데 말야

해남 울돌목서 '세계 생존 수영대회'

명량대첩축제 이벤트로 열려

세계 해전사에 유례없는 대전승으로 기록된 명량대첩지인 해남 울돌목에서 이색적인 '생존 수영대회'가 열린다.

목포대는 10일 명량대첩축제가 열리는 울돌목에서 국내 최초로 생존 수영대회 개발을 위한 프리 이벤트(Pre-Event)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목포대 관계자는 "최근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자가 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유속을 보이는 울돌목에서 스피드와 모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생존 수영대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목포대와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한국스포츠산업개발연구회와 합동으로 울돌목을 여러 차례 조사하고, 마네킨 실험 등을 통해 생존 수영대회를 준비해 왔다.

이 대회에는 30여 명이 참가해 유속이 가장 빠른 위치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그동안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도전하게 된다.

특히 이번 대회를 거쳐 내년에는 독립적인 세계 대회로 발전시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목포대는 설명했다.

울돌목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유속을 보여 불에서 스피드와 모험을 즐기려는 스포츠광들을 '유혹'하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검찰 "토착비리 대대적 수사"

전국 특수부장의의

대검찰청은 9일 전국특수부장회의를 열고 수사 패러다임 변화 방안을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수사 패러다임 변화를 다시금 언급하며 인사담계 수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공복적 출사에서 강조한 토착비리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또 개별 수사 사례를 통해 수사

방식의 변화를 증명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일선의 수사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검사장 회의를 통해 표적수사 논란을 빚었던 별건수사를 없애고 압박수사를 자제하기로 했으며 대검 중수부가 지방 검찰청의 수사를 돕도록 했다. 또 구속영장이 가각됐을 때 보강수사 명목으로 수사가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 발부시와 마찬가지로 10~20일 안에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병역비리자 軍 복무기간 1.5배 늘린다

병무청 '병역면탈 방지대책' 발표

병역면탈이 가능한 17개 질환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제도가 도입되고 '병역면탈 범죄자'에 대해 군 복무기간을 1.5배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무청 문병민 병역자원국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역면탈 보류 및 확인검사제 도입과 병역면탈 범죄 행위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병역면탈 범죄 종합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이 가능한 사구체신염,

분태상 고혈압, 신증후군 등 17개 질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병력이 없다고 의심되면 병무청이 지정한 전문의료기관에서 확인신체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제도는 2010년 또는 2011년부터 시행된다.

특히 내년부터 병역면탈 대상 질환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질환을 제외하고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사전, 사후 병력(病歷)을 확인한 후 신체검사를 최종 판정기로 했다.

또 병역면탈 범죄자에 대해서는 군 복무기간을 1.5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병역면탈 범죄로 수감된 사람을 보충역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도록 한 제도를 내년 또는 2011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연합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독자선정·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72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1 사 회 1 부 2200-612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문 화 선 황 부 2200-661 여 령 매 체 부 2200-679 체 육 팀 2200-663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광고매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F A X 02-773-933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